도내 정수장 물 수소이온농도 높은데…

17곳 중 어승생 등 8곳 환경부 기준 pH 8.5 육박
제주도민·관광객 일상생활과 직결 농도 낮춰야
지질학적 특성 이유 추정만… 과학적 조사 필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마시는 상수도의 수질기준 가운데 수소이온농도(이하 pH농도)가 환경부의 기준(5.8~8.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물로서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지만 물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기관 차원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강알칼리수에 가까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pH농도를 낮추는 역할이 요구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정수장 17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환경부의 기준을 넘어선 곳은 없었으나 다른 항목들에 견줘 유독 pH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서도 pH농도 수치가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왔다. 기준치를 넘어서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상수도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정수장 가운데 pH농도 8.0이 넘는 곳은 ▷어승생(8.4) ▷구좌·서광·유수암(8.2) ▷회수(8.1) ▷조천·금악·남원(8.0) 등 8곳(47.1%)에 이른다. 특히 이들 지역의 지난해 pH농도는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치였다. 어승생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8.4로 1.0이나 올랐다. 유수암도 지난해 7.8에서, 구좌·서광도 8.0에서 오르며 기준치에 육박했다.

이처럼 pH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제주가 조면암을 품은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먹는물 관리에 있어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지역 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 화학비료 과다 사용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질산성질소가 문제였다. 하지만 정수장 모두 수질기준(10㎎ 이하/L) 이하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된 먹는물의 기준은 pH농도 5.8~8.5로 우리나라 수질기준과 동일하다. 0~7은 산성이며 7에 가까울수록 약산성이다. 반면 그 이상은 알칼리성으로 9.0은 강알칼리수에 속하며 먹는물 기준을 벗어난다. 올해 수질검사에서 토평이 7.5로 나와 음용수로서 가장 우리 몸(혈액 7.4)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는 7.4를 기록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관계자는 "탄산온천이 나오는 산방산 일대나 옛 탐라대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수자원의 pH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며 "인체에는 해롭지 않지만 환경부 기준에 육박하며 pH농도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먹는물에 인공물을 첨가해 pH농도를 낮추는 것은 현재로선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 조사 선행과 지속적인 도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업무 방식 총괄 관리→단체유형 소관부서별 변경

도내 총 364개 단체 등록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업무가 총괄 관리방식에 단체유형에 따른 소관부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새로운 관리체계가 시행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관리체계 변경을 위해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64개(제주시 295, 서귀포시 69)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상시회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바탕으로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한 82개 단체는 말소 처리했다.

제주도는 소관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따라 등록업무와 정기점검 및 관리, 맞춤형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리체계가 관련부서별로 변경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사업은 기존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서귀포시 청·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7월부터 재가돌봄·가사·병원 동행 등 4개 분야 지원

서귀포시는 7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 돌봄 청년(13~39세)이 대상이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4개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시행 첫해인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청·중장년 50명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가령 돌봄·가사 서비스를 월 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64만 8000원의 정부 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는 월 1만 285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으로 정해졌다. 연장을 원할 경우엔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들은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일 기준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청·중장년은 6명(가사 2, 식사 2, 병원 동행1, 심리 지원 1)으로 나타났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청년이라면? 강사 기회 잡으세요"

청년교생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가 '2024년 제주청년센터 재능나눔 프로젝트: 청년교생' (이하 청년교생)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교생은 강사 경험이 필요하고 강사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직접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강의 경력이 없거나 적은 도내 청년(19~39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참여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다.

청년교생 참여자에겐 강의 시연과 전문가 피드백, 최대 3회 강의 운영 기회 제공, 최대 27만원의 강사료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아이고, 힘들어"… 뭍으로 나오는 해녀들 9일 제주시 애월읍 바다에서 해녀들이 수확한 성게를 뭍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직업 훈련 강화

서귀포시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운영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은 국제결혼으로 서귀포에 둥지를 튼 여성들의 직업 역량을 키워 취·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업 훈련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이 개설됐다.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네일아트로 나의 직장을 찾잡(Job)', '지문으로 나의 미래를 찾잡(Job)'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네일아트 과정은 결혼이민자 10명을 모집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진선희기자

제주해경, 8월 2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단속

제주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100t 이상 또는 최대 승선인원 15인 이상인 어선을 상대로 폐기물기록부와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해경은 점검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폐어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오염물질을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계도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